

與 “단독국회” 野 “실력저지”

한나라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야권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극한 대립

한나라당이 22일 ‘단독국회 소집 강행’ 방침을 정하자 민주당이 실력 저지를 공연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 랭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천 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백용호 국세 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당 분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향 후 후속인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의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며 “23일 오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 무소속과 연 대해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신성명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5대 요구사항 외에 미디어법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여야간 합의사항인 ‘미디어법 6월 처리’를 무산 시키려는 의도”라며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정 세균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급등한 지지율을 내부 동력으로 유지해야 하는데다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강행 방침에 대한 해법 마련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 대표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정 대표는 트레이드마크인 ‘Mr. 스마일’ 이미지를 접고 지난 연말연초 입법부쟁 당시의 ‘투사 모드’로 전환할 태세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참으로 모질고 득한 정당”이라며 “야당이 그만큼 얘기하고 국민이 그 정도 절규했으면 이제는 그 뜻을 겸허히 수용할 때도 됐건 만 끝까지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소집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단독개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진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원장(오른쪽부터)이 굳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더 이상 한나라당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투쟁의 상대로 규정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정권이 정말 반성해 국민과 함께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한나라당은 170여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으로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며 “단독국회 소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단독국회 개회에는 반대하지만 남북문제와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산적하다는 점에서 1주일 간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야 설득에 나설지 지켜본 뒤 29일 독자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의회 민주주의의 사랑 선고에 다른 아버지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현 상태로 단독개회를 강행하면 과국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단독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임시국회는 집회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개회될 예정이다.

임시국회는 현법상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 기일 사흘 전 공고를 걸쳐 개회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쇄신 내홍 속 분열 가속화하나

쇄신특위·민본21, 내각 개편 등 거듭 촉구

親李 온건파 “무조건 바꾸라는 건 옳지 않아”

청와대 측은 이날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당 핵심 관계자도 “민본21의 주장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 훈련기 중단’을 요구하며 쇄신파와 각을 세웠던 친이계은 건과와 종립성향 초선의원 48인도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친이계 한 온건파 의원은 “쇄신파처럼 무조건 다 바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청와대를 세게 압박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7인 성명’에 가담한 친이계 강경파들은 속도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전날 단행된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에서 쇄신의 조짐이 나타난 만큼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좀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얹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권 전면쇄신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한나라당 내 계파 분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가급적 이를 시일 내에 집권 2기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리형 대표 종식 및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본21은 조만간 박희태 대표를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또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도 22일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쇄신이) 허지

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가급적 이를 시일 내에 집권 2기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리형 대표 종식 및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본21은 조만간 박희태 대표를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로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안장된 곳 바로 위 지상의 봉분 자리에 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태를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비운은 별도로 쓰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 한 문장을 새기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盧 전 대통령 비석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세우기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비석이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기슭 아래에 건립된다.

고 노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는 22일 전문화재청장인 유홍준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작은 비석’은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기슭 아래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

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200여m 떨어진 지점으로 봉화산 등산로 입구 오른편의 현대 주말농장 터라고 노 전 대통령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의 유골 안장 위치를 생각와 사저, 부엉이바위와 사자바위가 모두 조망되는 곳인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기슭 아래에 세우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 곳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

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200여m 떨어진 지점으로 봉화산 등산로 입구 오른편의 현대 주말농장 터라고 노 전 대통령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의 유골 안장 위치를 생각와 사저, 부엉이바위와 사자바위가 모두 조망되는 곳인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기슭 아래로 세우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환경단체 등에 중재인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남치기 통과’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며 “남은 10여일 동안 좀 더 협의한 뒤 7월 정례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환경단체 등에 중재인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남치기 통과’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며 “남은 10여일 동안 좀 더 협의한 뒤 7월 정례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환경단체 등에 중재인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남치기 통과’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며 “남은 10여일 동안 좀 더 협의한 뒤 7월 정례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무등산 조례’ 처리 또 연기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전우근 의원



시험대 오른 ‘정세균 리더십’

첨예갈등 국회 대응 해법찾기 고심

이에 따라 정 대표가 6월 임시국회의 전격적 등원을 결정하거나 영수회 담제안 등의 반전 카드를 던질 계획은 헛된 듯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개회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물러섰다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은 물론 모처럼 결집한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대표의 뒷배를 맞았는데 따른 ‘학습효과’와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이번

미디어 법 강행 처리를 막아내는 등 6월 임시국회를 주도한다면 야권의 대표적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4·29 재보선 공천 당시 19대 노회찬 후보에 선언이라는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동영 의원과의 공천 갈등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의원직 사퇴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무작정 등을 돌릴 경우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난에 부딪힐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이번 미디어 법 강행 처리를 막아내는 등 6월 임시국회를 주도한다면 야권의 대표적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인 7월 제180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키로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또 “환경단체 등에 중재인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남치기 통과’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며 “남은 10여일 동안 좀 더 협의한 뒤 7월 정례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환경단체 등에 중재인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남치기 통과’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며 “남은 10여일 동안 좀 더 협의한 뒤 7월 정례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환경단체 등에 중재인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남치기 통과’라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며 “남은 10여일 동안 좀 더 협의한 뒤 7월 정례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 미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정)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금 부과